

[서식 예] 임금청구의 소(직상건설업자의 연대책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건설 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7. 00. 00.부터 2017. 00. 00.까지 피고 000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 000은 원고에게 임금 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근로내역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3. 그리고 피고 000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며, 피고 00 주식회사는 하수급인인 피고 000의 직상 건설업자로서 피고 000과 연대하여 동인이 사용한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4.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인 2017.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1통 |
| 1. 소장부분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3년(☞소멸시효일람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 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 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 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